

중소기업청,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 
-피해기업 자금지원과 함께 문제해결형 단기 컨설팅 사업 도입-



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·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, 중소기업청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

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8일 발빠르게 '중국대응태스크포스(TF)'를 설치하여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.

4월부터 이를 본격화하여, 긴급경영안정자금, 중국인증,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 지원을 시작합니다.

우선,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‘긴급경영안정자금’을 지원합니다.

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‘보호무역 피해기업’을 추가하였으며(3월 2일), 예산확대 편성(750억 원→1,250억 원, 500억↑), 지원조건 완화\*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
\* 지원조건 완화 : 매출 10% 이상 감소,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

검역·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합니다.

이번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(CCC), 중국위생허가(CFDA)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·인증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, 기술컨설팅,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(One-stop)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
또한,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해드립니다.

마지막으로, 통관지연·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‘단기 컨설팅 사업’이 신규 운영됩니다.

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기업을 선별하면, 기업당 약 350만 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되고,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 ‘해외민간네트워크’를 피해기업에 1:1 매칭하여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섭니다.

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,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 연락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

중소기업청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, 산업부·외교부·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.

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